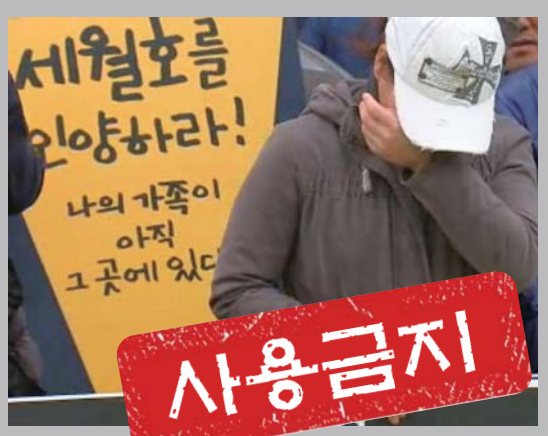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총파업특보 17호

발행인 김연국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0월 31일

'보도지침' 망령 부활

김장겸 체제 보도국, 부당 · 편파 영상 지침



부당하고, 강압적이었다. 편파적이고 악의적이었다. 마치 5공화국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불공정 보도영상지침'을 조직적으로 내려 보냈다. 행동대장은 영상편집부장으로 장기집권하고 있는 권태일 부장, 우두머리는 정치부장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친 김장겸 사장이다.

조합은 최근 김장겸 체제의 보도국 안에서 자행됐던 보도영상지침의 물증을 확보했다. 권태일 영상편집부장이 그동안 부원들에게 수시로 영상편집 지침을 담아 보낸 메일과 문자 메시지다.

세월호 진실 가리고 촛불 민심은 축소 · 왜곡

보도영상지침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이 금지됐다. 오열하는 유가족의 얼굴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고, 슬픈 음악을 넣는 것도 불허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귀 등도 역시 방송으로 못 나가게 지시했다.

촛불집회에는 부정적인 영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참여 인원도 적게 보이고자 애쓴 반면, 태극기집회는 어떻게든 미화하고자 했으며, 규모 또한 많아 보이는 편집을 지시했다. '태극기집회의 참여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많다'는 MBC 뉴스의 주장은 이같이 조작된 영상 편집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외부영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영상 편집을 지시한 증거도 확인됐다.

몸통 · 배후는 김장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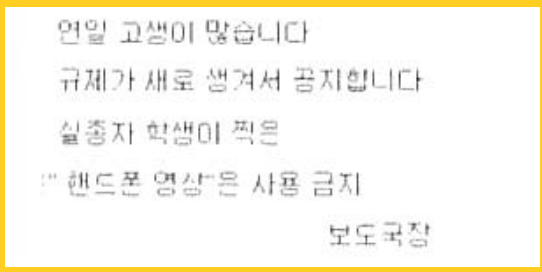
이 뿐만 아니라 권태일 부장은 영상편집부 부서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제3노조 가입을 강요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영상취재부가 공중 분해되면서, 권태일 부장은 보도부문 영상 관련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장겸 사장이 있었다. 그는 보도국장 시절, 영상편집부를 보도국장 직속 부서로 만들면서 이 같은 전횡을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 실제 지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영상지침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유가족들을 '깡패'라고 지칭한 이후 내려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핸드폰 영상 사용 금지를 지시하는 메일에는 '보도국장 지시'라고 명시돼 있다. 몸통이 바로 김장겸 사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다.

MBC 뉴스는 여전히 불공정한 보도지침의 망령이 지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없이 공정방송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은 김장겸 사장과 권태일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세월호 진실’ 통째로 지웠다

MBC의 세월호 보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유가족을 폄훼한 최악의 뉴스였다. 세월호를 다룬 보도영상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일베’가 아닌 이상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 ‘반인륜’ 보도영상 지침이 세월호 관련 보도를 더욱 더 망쳐놓았다.

단원고 학생의 ‘휴대폰 영상 사용 금지’


언일 고생이 많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겨서 공지합니다
실종자 학생이 찍은
''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
보도국장

[2014년 5월 2일 보도영상 지침 공지 메일]

[이후 희생자 휴대폰 영상은 뉴스에서 배제됨]

권태일 영상편집부장은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린다. 이는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의 지시였다. 이 지침에 따라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담고 있던, 침몰과 구조 상황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했던 휴대폰 영상은 MBC 뉴스에서 사라졌다. 영상자료 관리시스템에 다수의 휴대폰 영상이 확보된 상태였지만, 보도국 수뇌부의 농간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미안해, 사랑해’는 되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는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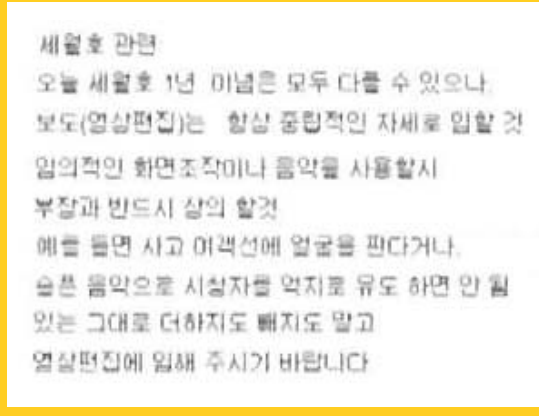
영상조작에 나선 권태일 부장은 오히려 ‘(MBC가) 있는 사실만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하라’고 재차 지시한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붙은 글귀 가운데 ‘미안해, 사랑해’는 허용되지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는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세월호 추모 및 정부 비판 팻말은 모자이크 처리]

[‘촛불 비하’ 태극기 집회 메시지는 집중 보도]

또 손팻말도 금지됐다. 권 부장은 ‘팻말과 리본 등의 글 내용을 참고하라’며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랬든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지 말라’고 부원들을 위협했다. 결국 MBC 뉴스 영상에서 정부 비판 팻말은 사라졌고, 촛불을 비난하는 문구만 화면에 계속 노출됐다.

세월호 1년, “슬픈 음악 쓰지 마라”


세월호 관련
오늘 세월호 1년 이념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보도(영상편집)는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임할 것
임의적인 화면조작이나 음악을 사용할시
부장과 반드시 상의 할것
예를 들면 사고 여객선에 얼굴을 판다거나
슬픈 음악으로 시청자를 억지로 유도 하면 안 됨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영상편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은 2015년 4월 16일, 권태일 부장은 다시 지침을 전한다. ‘임의적인 화면조작이나 음악을 사용할 시 부장과 상의하라’며 ‘슬픈 음악으로 시청자를 억지로 유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과거 화려한 영상구성과 효과음 사용으로 유명했던 그가 세월호 보도에선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 유가족이 우는 장면조차 사용이 금지되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리포트에서 조차 유가족의 눈물은 찾을 수 없었다.

대리기사 폭행 논란은 ‘CCTV 범벅’

세월호 피해자의 얘기를 외면하던 MBC 뉴스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만큼은 타 방송사보다 2배 이상 보도하고 나섰다. 특히 유가족이 폭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CCTV 영상은 48초 동안 반복 사용됐다. 권태일 부장이 직접 편집실로 찾아와 지시했고, CCTV 대신 현장 촬영 영상을 쓰자는 의견도 묵살됐다. 전방위적이면서도 집요한 지침, 권 부장만의 뜻이었을까.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 등 보도국 수뇌부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편파 · 왜곡…악마의 편집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악의적인 영상지침은 세월호 이외의 사건에도 어김없이 내려왔다. 지난 겨울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다룬 보도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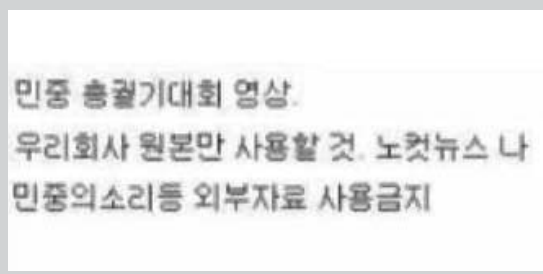
'촛불'은 죽이고 '태극기'는 키우고

두 집회를 보도한 올해 2월 18일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이다. 촛불집회 영상은 집회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인 모습 위주다. 전체 참가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태극기집회 화면은 집회 규모를 극대화하는 부감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출처도 불분명한 유튜브 영상이 쓰였다. 권태일 영상편집부장이 직접 구해온 것이었는데, 방송불가급 화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리포트에 15초 동안이나 사용됐다.

영상 취재 단계부터 편파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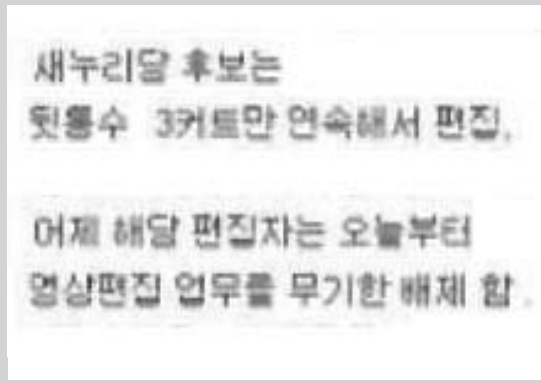
영상편집은 물론 영상취재 단계부터 악의적인 지침이 내려왔다. 촛불집회 리포트를 보면 탄핵과 무관한 구호도 나온다며 '이석기 석방' 문구가 적힌 현수막 영상이 사용됐다. 촛불집회를 특정 세력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태극기집회 리포트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이 등장한다. 모두 당시 허무호 사회2부장의 영상취재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애초 현장에 나갈 때 이런 영상을 찍어오라고 콕 집어 지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태극기집회 취재 현장에서는 몇 대 없는 유모차를 찾아 촬영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백남기 농민 쓰러지는 장면 사용 금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도 영상지침이 내려왔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노컷뉴스'의 영상. 경찰 과잉진압의 증거가 되는 결정적 영상인데, 우리도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일 부장은 이 영상이 '외부영상'이라며 사용하지 말라고 메일로 지시했다. 결국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영상은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회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이 줄로 경찰차를 묶어서 끄는 장면, 유리창을 깨는 장면 등을 위주로 리포트를 구성했다.

특정 정당에 불리한 편집? 곧바로 징계



정치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신인 정치인을 소개하는 리포트. 흔한 정치 기획 리포트로 소속 정당마다 한 명씩 소개했다. 하지만 권태일 부장은 리포트 편집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새누리당 후보만 뒤통수가 연속으로 나가고, 다른 정당 후보는 상냥해 보이게 편집했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편집자는 취재기자와 상의해 편집했고, 뒤통수만 골라 편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역 편파방송의 극치라고 트집을 잡고 징계까지 내렸던 권태일 부장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왜 새누리당 후보를 더 돋보이게 편집하지 않느냐는 말 아니었을까.

특정 노조 가입 강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충격적인 보도 영상 지침을 하달한 권태일 부장(사진)의 패악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부서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2월 20일, 권태일 부장은 전 부서원에게 '대외비'라는 제목의 비밀스러운 메일을 보낸다. '제3노조 공동위원장인 김세의 기자, 박상규 기자, 최대현 아나운서를 만나 영상편집부원들의 업무직, 연봉직 전환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새로운 노조에 힘을 보태주고 우리의 바람을 성사시키자는 생각"이라며 대놓고 제3노조 가입을 권유한 대목이다. 업무 지휘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장이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음날에는 기존노조 집단 탈퇴 문제, 제3노조 가입 문제, 반대하는 구성원의 교통 정리 문제를 놓고 전체 회의까지 열었다. 기존 노조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낮은 세 명의 부서원은 회의에서 제외됐다. 이 비밀스러운 회동이 외부로 알려지자 권태일 부장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1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기행까지 벌인다.

회사가 배후조종?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편집부와 제3노조와의 두 차례 회동에 정책홍보부장이 동석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제3노조에 가입할 경우 승진 등 각종 인사 문제에 이익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있었다고 한다. 회사에 묻는다. 신생 노동조합의 간담회 자리에 정책홍보부장이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3노조 가입 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은 회사의 방침인가? 사실이라면,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영상취재부 해체 이후 보도 영상 암흑기

지난 5년 간 영상편집부는 "사실상 무소불위 권태일의 철권통치"였다고 부서원들은 말한다. 불공정한 영상 지침과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공정방송이 핵심이던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영상취재부문을 강제로 해체한 사측의 만행에 있다. 영상취재부 기자들이 다른 부서로 흩어지거나 유배된 사이 영상편집부는 보도국 유일의 보도 영상 관련 부서가 됐다. 특히 김장겸 보도국장 시절에는 국장 직속 부서로 개편되면서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영상 왜곡을 자행했다. 영상취재부가 건재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전횡이다. MBC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다.

보도지침 몸통은 '김장겸'

방문진, 즉각 해임하라

지난 5년간 MBC뉴스의 숨통을 죄던 '보도지침'의 실체가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울분은 묻혔고, 극우 세력들의 도심 집회는 과장돼 전파를 탔다. 모두 이 '보도지침'이 뉴스의 뼛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한 결과다. 누가 이런 지침을 만들고 지시했나.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바로 김장겸 사장이다. 이번에 드러난 보도지침에는 '사장된 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빠져나가려던 김장겸의 그간 악행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정치부장을 거쳐 2013년 5월 보도국장으로 영전한 김장겸은 이 보도지침을 통해 뉴스를 철저하게 파괴한 공로로 이후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수직 상승했다.

그가 내린 지침은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다. 김장겸의 한 마디에 MBC뉴스 제작의 최종 단계인 영상편집 인력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사실상 모든 지침은 그가 주재한 편집회의를 통해 전달됐고 구체적인 지시로 가다듬어졌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은 실종자 학생의 휴대전화 영상은 '쓰지 말라'는 김장겸 한마디에 뉴스에서 사라졌다. 사고 발생 열흘째인 2014년 4월 25일 김장겸은 편집회의에서 "유가족이 아니라, 완전 깡패네"라며 극언을 토해냈고 이후 보도지침은 더 극성을 부렸다. 지침의 수는 많아졌고 더 악랄해졌다. 이 발언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유가족의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불렀다'는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의 보도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 김장겸의 보도지침으로 MBC뉴스는 '사회적 흉기'로 변해간 것이다. 김장겸 체제에서 오보와 참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경영진은 "초기 대응을 잘했다. 자신감 넘치는 계기가 됐다"며 자화자찬했다.

새 진용 갖춘 방문진, 첫 임무는 김장겸 해임

이제 김장겸 사장이 떠나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졌다. 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2명이 정식으로 임명됐다. 새로 진용을 갖춘 이사회의 첫 임무는 바로 공영방송을 망친 김장겸의 해임이다. 김 사장은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거치며 문재인 · 안철수 관련 대형 오보를 생산한 장본인이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조롱했고, 편향된 보도지침으로 MBC뉴스를 추락시켰다. 저항하는 기자들은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치명적 결함'에도 그를 사장으로 앉히며 뒤를 봐 준 친박 실세들의 보호막도 걷혔다. 당장 해임하라. 김장겸 사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흑역사'는 현재진행일 수밖에 없다.

MBC 파괴범 전방위 압수수색… 오늘부터 줄소환

국정원의 MBC 파괴를 도운 내부자들에 대한 어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부터는 이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된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오늘(31일) 이우용 전MBC 라디오 본부장과 백종문 부사장을 불러, MB 정부 당시 라디오 작가와 진행자를 교체한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한다. 특히 백종문 부사장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김재철 전 사장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

어제 압수수색은 이른 아침 전격적이었다. 김재철 전 사장과 전영배 C&I 사장, 백종문 부사장 등의 자택에 대해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이들은 MB정부 국정원의 이른바 'MBC 파괴 공작'을 MBC 내부에서 충실하게 실행한 핵심 부역자들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검찰은 "이들이 당시 PD수첩 등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 및 진행자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어제 오후 자신의 휴대폰 감식에 참석하기 위해 검찰에 나온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프로그램 하차를 종용했던 김미화씨에 대해선 '인사만 했다'고 발뺌했다. 어차피 입만 열면 거짓과 궤변만 늘어놓은 이들 김재철 일당에게 순순한 자백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 어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이런 차원에서 읽힌다. 검찰이 당시 국정원 MBC담당 직원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김재철 일당과 미처 다 입을 맞추지 못한 '삐박' 증거를 찾기 위해서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지역사 사장단 일괄 사퇴'와 '국부장급 대폭 물갈이' 등을 지시한 국정원 문건 그대로 당시 "경영진들이 교체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이나 문건 등의 자료를 4박스 분량 압수해갔다.

이제 검찰 수사는 MB정권 당시 김재철과 전영배 같은 '적폐의 뿌리'에 육박해가고 있다. 그 뿌리를 파헤치다보면, 삔어 나온 가지며 줄기가 보일 것이고, 그 정점에 김장겸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적폐의 정점이자, 수사의 종착지다.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영주를 즉각 해임하라

MBC의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 감독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 검사 감독에 착수한 방통위는 방문진의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절차에서 방문진은 시종 불성실한 태도로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고영주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적합한 인사였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평생에 걸쳐 극우적 이념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사람이다. '부림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하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된 뒤에는 MBC를 유린하는 데 앞장섰다. 노조원들을 '유휴인력' '잔여인력' 등으로 칭하며 제작 현장에서 쫓아내라고 MBC 경영진에 주문했다. 방문진의 광고 예산을 극우매체들에게 몰아주기도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MBC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그의 지시와 묵인에서 비롯됐다.

지난 27일 방문진 국감에서도 고영주는 수준 이하의 언행과 막말을 쏟아냈다. 'MBC가 공영방송이냐'는 의원의 질문에 "공영방송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국정원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장은 애국활동을 하는 분이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방송 장악'을 실행한 국정원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시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소신대로 했다면 우리나라는 적화의 길을 갔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궤변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고영주는 이날 국감을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는 최근까지도 극우적 이념 편향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 노동조합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게 하나도 없다. 태블릿PC는 가짜"라고 주장했고, 국정원의 MBC 장악에 대해선 "나라가 잘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라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정권을 두둔했다. 고영주는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방통위는 하루라도 빨리 고영주를 공영방송 MBC의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하라. 그는 공영방송을 극우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MBC를 사적 이익 추구에 동원했다. 국정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해 방송 제작 종사자들을 내쫓고 MBC의 위상을 바닥까지 추락시켰다. 그는 이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범죄 피의자 신분이다. MBC 구성원들은 그를 이사장으로서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 고영주가 하루라도 더 방문진 이사장에 머무르는 것은 MBC의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에 대한 모독이다. 방통위는 주저하지 말고 고영주를 즉각 해임하라. 이는 언론자유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다.

2017년 10월30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지역 대변인에서 노조 탄압 핵심으로

MBC 법무실장 정재욱, 지역MBC와의 악연

"그 정재욱이 그 정재욱이냐?"

총파업 돌입 직전이던 8월 하순경. MBC 법무실장이 사표를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MBC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체제에 부역했던 인물들이 하나 둘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해당 기사가 지목한 인물은 정재욱 법무실장이었다. 과거 지역 언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던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 때 우리와 함께 일했던 정재욱 변호사가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MBC 부당노동행위의 핵심이라 불리는 정재욱 법무실장, 그 사람이랑 동일인물인가요?"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정재욱. 지역 구성원들에게는 너무나 착잡하고 씁쓸한 이름이다.

지역MBC 경쟁력 위해 발로 뛰던 변호사

MBC 법무실장으로 악명을 떨쳤지만, 정재욱은 지역MBC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그 인연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로 시작됐다. 그는 통합되기 전 진주MBC의 PD로 시작해, 지역민방인 대구방송(TBC)를 거쳐 지난 2005년부터는 지역MBC와 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지역MBC가 전체 네트워크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합체 성격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던 시기였다. <지역MBC 정책연합>이란 이름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MBC의 인력을 6~8명 정도 파견해 지역방송 정책 관련 업무를 시작했고, 정재욱은 자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진주MBC PD시절 선배였던 김석창(미디어사업본부 문화사업국장)의 소개로 지역MBC에 다시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당시 지역MBC 정책연합은 지역MBC가 생산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전국유통창구를 고민했고 정재욱은 이에 대한 법적 자문역할을 수행했다.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지만, 지역MBC정책연합은 <BOB>이라는 채널 이름까지 확정해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 결국 '지역전문채널 MBCNET'으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 정재욱은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3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다.

'백종문 녹취록'의 등장 인물

한 때였지만 지역MBC와는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그는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친정 진주MBC를 떠나 대학 선배 김재철을 좇아 MBC에 입성한 김석창과 함께 김재철의 그늘로 들어간 것이다. 2011년 3월 MBC플러스미디어 이사 자리에 오르고, 2012년 '170일 파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철의 변호까지 맡더니, 2014년 MBC의 법무실장으로 특별 채용된다. 그는 김재철-안광한-김장겸으로 이어지는 MBC의 암흑기 동안 노조탄압의 주역이었다. 그 노골적인 증거는 바로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의 회동이 처음 열린 자리에서 정재욱은 파업 관련 1심 재판에서 사측이 모조리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송 담당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만 해도 정재욱은 김재철의 개인 변호인에 불과했다. 법무실장으로 특채된 이후 열린 회동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자처하며 극우매체 <폴리뷰>에 MBC 내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백 본부장은 "(정 실장이) 임원회의도 다 들어간다"며 "김세의보다 정확하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쌍용차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MBC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 이 자식들 봐라'라는 둥, '가만 안 둘 거거든 내가 진짜'라는 둥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망발을 내뱉었다. 이 뿐만 아니라, "당구장 건물이만한 데 세 얻어서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느냐"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마저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재욱
법무실장

정재욱은 아직도 MBC의 법무실장이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경영진이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총괄 지휘한 정재욱이, 행여 그간의 사정을 폭로할까 두려워한 경영진이 그를 압박해 주저앉힌 것으로 보인다.

지역 MBC 출신으로서 지역 MBC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던 변호사 정재욱과 노조 파괴의 선봉에 선 MBC 법무실장 정재욱. 그 엄청난 간극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역MBC 구성원들의 배신감이나 원망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파괴와 노조 탄압에 대한 법의 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